

1.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21. 8. 26.(목) 15~17:30 / Google Meet(영상회의)
- 참석 : 28명 (박종서 단장 등 위원 13, 관계부처 13, 사무국 등 2)

2. 회의 결과

- (발표) 15:10~16:05(55분) * 붙임 <제2차 회의 자료집> 참고
 -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방안(국립농업과학원 강성수 연구관)
 -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개선과제(에코리더스인증원 임석호 위원)
 - EU 유기생산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내용과 시사점(단국대 김태연 위원)
- (토론) 16:20~17:30(70분)
 - 친환경농업의 소득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며 기술적 안정화로 생산 안정화를 도모해야 함. 농촌 고령화로 인한 청년, 여성, 소농 등 생산주체의 형성 및 정주문제를 해결해야 함(곽현용)
 - 저탄소 농업기술의 현장성, 현실성에 문제가 있음. 저탄소 인증 등 추가적 인증은 생산자에게 부담되므로, 친환경인증에 집중해야 함. 유기 등 친환경농산물의 가치가 제대로 지불돼야 함(오순이)
 - 가공식품분야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. 유통·가공과정의 온실 가스가 $\frac{1}{3} \sim \frac{1}{4}$ 수준이므로 기후변화 대응 비중을 높여야 함(정규호)
 - EU가 소비자 행동변화를 키워드로 하는 것처럼, 우리도 생협 외 일반소비자의 행동변화가 중요함.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홍보, 교육부문의 전략 강화 필요.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던 것에서 공익을 추구하도록 변화해야 함(유미화)
 - 친환경농산물의 가격문제를 해결해야 함. 공공영역도 가격문제로 한계가 있음. “유기농업지원센터(가칭)” 등 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민, 조직을 지원해야 함(김병혁)
 -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고용의 매개(청년, 귀농인 등), 지역의 중소

가공사업자의 농가가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. 보조정책과 환경 농업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함. 농업분야 외에 포장, 원자재, 제조방식, 폐기, 재활용 등 전과정을 정책대상으로 해야 함(전경진)

- 소비자 인식 전환이 필요함. 친환경을 ‘농약 없음’이 아니라 ‘환경 보전’으로 인식해야 함(임석호)
- 소비자행동 변화가 중요하며 가격문제를 해결해야 함. 농업과 관계된 전과정 분석이 필요함(김태연)
- 탄소중립정책의 기술주의를 넘어야 함. 수입유박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배출이 적어 보임
- “공장형 축산 억제” 표현을 완화하여 “생태적 축산으로 바꾸자”로 표현했으면 함. 대체육 육성정책에 축산업계 반발이 큼. 논농업에 퇴비사용 시 메탄 발생이 높은 점은 친환경 축소가 우려됨(신건준)
- 투입 자재에 대한 방향도 필요함(박종서)
- (농식품부) 소비자 인식 변화가 중요함. 전과정 분석과 생물다양성 인식이 필요함 “공장형 축산 억제” 표현은 조심해야 하며, “동물 복지 확대” 등으로 문서·기록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의견수렴과 개선이 필요함
 - 제도분과 내용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(유기농 분리: 유기 vs 무농약 대결구도 우려). 지금도 과정중심을 포괄하고 있고 과정과 결과가 모두 중요함. 전문인정기구도 사업규모가 더 커져야 가능함
 - 지불제도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으며, PGS는 신중해야 함
 - 추진체계를 과에서 국으로 상향하는 문제는 언급하기 어려움
 - 협의회 법정화도 검토가 필요함
- (농촌진흥청)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2.9%는 산업사회의 결과. 식량안보 문제도 강조해야 함. 유박 사용 통계가 없어 배출량 계산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통계자료가 필요함. 저탄소 인증이 확산 중으로 적극 이용이 필요함. 소비자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함

3. 향후 계획

□ 제3차 회의: 2021년 9월 28일(화) 또는 30일(목)